

'기금운용본부 이전 재검토' 강력 반발

(국민연금공단)

더민주 도당 "쓸데없는 논쟁으로 헛힘 쓰지 말라"... 국민의당 "새누리당 공식 의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도내 정치권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금운용본부의 전주기전 원점 재검토' 발언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11일 각각 논평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과 정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문형표 이사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금본부 전주 이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면서 "이미 내년 2월 기금본부 전주 이전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준비가 한창인데 뜬금 없이 '재검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당은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기금본부 전주 이전 자체를 무산시키고 공단에서 분리시켜 공영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벌여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쓸데없는 논쟁으로 헛힘 쓰지 말고 모두

가 기금본부 운용인력의 처우와 정주여건 개선에 매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새누리당과 국민연금공단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전주기전 원점 재검토와 서울사무소 운영 등은 현행법에 상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이 당의 공식 의견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10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수의

원(전주갑)이 "공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법안이 자동폐기된 것으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면서 "기금본부는 공영화 문제를 떠나서 독립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기금운용의 차이가 없도록 전주 이전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더해 논란을 키웠다. /신광영 기자

이상직,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감사패



더불어민주당 전주를 지역위원장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제20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난 19대 국회 의정활동 동안 노인복지향상에 힘쓴 공로로 대한노인회 전주지회(회장 오경남)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상직 위원장은 제19대 국회 재임기간 동안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신념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및 정책활동을 펼쳤으며, 양지노인복지관 지원 및 효자동 노인복지관(효자정춘문화복합센터) 건립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또한 전주를 지역구 내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각종 불편함을 개선했다. 특히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통해 복지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참여해 '효자동 노인복지관(효자정춘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감사패를 받은 이상직 위원장은 "어르신이 건강해야 나라가 행복해진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수고와 땀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만큼 항상 잘 섬기고 효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과 백남기 농민 품남분향소 조문

전북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11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이후 전주 품남분향소(가역의 광장)에 설치된 고(故)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조문에는 황현 의장을 비롯해 송지용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는 분향을 하며 고 백남기 농민을 기렸다.

조문을 마친 황현 의장은 "도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남겨노소 할 것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11일 임시회 본회의 이후 전주 품남분향소에 설치된 고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야당, 전경련 해산촉구결의안 추진 직접 수단 부족 '보여주기' 그칠 것

미르·K스포츠택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을 상대로 한 야당의 해산 촉구 압력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야당은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잇따라 제출할 태세다.

다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선연적인 의미만 있을 뿐 전경련 해산을 압박할 직접적인 수단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 자료에서 "더이상 경제단체의 대표가 아닌 특정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 잡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경련은 2011년 정치인 로비 그룹별 할당내부보고서 의혹, 어머니연합 지원의혹과 미르·K스포츠택단 모금과정 기업들에게 강제 할당을 하는 등 아직도 정경유착의 창구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과 중소기업은 외면한 채 특정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 잡은 전경련은 자발적 해체를 위한 결의안에도 여러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여야와 보수·진보를 초월해 울려 퍼지는 정경연 해체의 목소리를 담아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죽하면 같은 경제단체인 경총 회장조차 '대기업 발목을 비튼 기가 막힌 일'로 묘사했느냐"며 "이제 회원사를 상대로 정권이 할당한 돈을 수금하러 다니는 전경련을 더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지도부가 일제히 전경련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 해산을 주장하는 야당의원들도 점차 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전경련은 해체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에 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택단 외에도 3조원 정도 사회공헌기금을 내는데 이것이 각종 로비단체로서의 압력행사를 한다. 심지어는 국회에도 압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허남주 "하위직 위주도 BSC 성과관리 개선돼야"

전 직급 대상 운용태 부작용 발생... 지원부서·힘없는 부서 하위권 포진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형 BSC 성과관리가 실패조건을 모두 갖췄지만 허점이 많은 성과평가시스템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은 17개 광역 시·도 중 전 직급을 대상으로 BSC 성과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광역단체다.

서울을 비롯한 14개 시도에서는 4급 과장직위까지, 2개 도에서는 5급까지를 BSC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 직급을 대상으로 BSC성과관리를 운용하다 보니 실제 부서장들의 성과관리가 부서장 고위업무가 아닌, 하급자

업무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

예컨대 2016년도 부서평가결과, 총 91개 부서 중 BSC를 담당하는 성과관리과가 2위를 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와 같은 BSC 지표들은 지표만 잘 설정해서 관리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BSC 반영이 어려운 지원부서나 힘없는 부서들이 하위권에 대거 포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남주 의원은 "전라북도 직원 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 실시했다"면서, "BSC는 성과관리방식으로 적합하지도 않고(약 70%),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 되지 않으며(79%), 기관발전 위해 필요한 방법도 아닐뿐더러(약 68%), 평가과정

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66%), 방법도 적절하지 않으며(71%), 결과 수용성도 별로인 것으로(72%)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하위직급 공무원들은 '공무원 출세'를 위한 도구다. 이쁜놈 미운놈 가려내려는 내력도 있다. 현실과 동떨어졌으며, 공공조직에 맞지 않는다. 부서평가가 불필요하다. 업무증진에 도움 되지 않는다.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실적 부풀리기"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기업도 실패하는 BSC 세 가지 조건을 전라북도형 BSC가 모두 갖췄다"면서 "현행과 같은 하위직 위주의 BSC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비상용발전기, 정기검사 10대 중 1대 불합격

'비상용' 자가발전기 10대 중 1대가 관리 미흡으로 유사시 비상가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익산)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국 8만2105개의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 중 공공기관에는 1만2669개(15.6%), 민간 6만9536개(84.4%)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용발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비상용발전기의 20~25% 정도인

2만여개의 발전기를 2~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점검한 비상용발전기 1만9057개 중 매년(5년간 평균치) 1858개(9.3%)가 동작상태 불량 등으로 불합격 되고 있다.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3157개 중 177개(5.6%), 민간 비상발전기 1만6800개 중 1681개(10.0%)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

김종희 "수협, 도내 어업인들 대변해줘야"

새만금 내측 한정어업·위도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한시 허가 위해

국민의당 김종희 의원(김제·부안)은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내측 어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정어업 허가위도 부안 위도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한시적 허가를 위해 어업인들을 대변해줘야 할 수협이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새만금 내측 어민들은 새만금 개발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부에 의해 그들 가족들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어업의 터전을 잃고 생계유지도 힘들 정도로 생활하고 있으며, 부안 위도의 수많은 영세어민들이 자신들의 생

존권이 달린 멸치를 잡기 위해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 속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비록 지금 당장의 어로 활동은 규정상 불법이지만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존권을 보호해줌으로써 불법과 단속이 난무하도록 정부가 더 이상의 불법어업으로 범죄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현실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어민들을 대변해줘야만 하는 수협중앙회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부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과 부처 간 책

임회피로 새만금 내측 어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 새만금 내측 조업활동은 불법으로 단속하고 외측은 정박할 형이 없어 어선이 나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항구 대체어항 개발까지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새만금 내측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하우빨리 전북도와 상의해서 정부부처가 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반영하여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2015년 말 새만금 내측 조업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도 중지한 상태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재만 "군산항 제1·2 부두 기능조정 철회하라"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은 해양수산부의 군산항 제1부두와 2부두에 대한 기능조정 철회를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은 "군산항 제1부두, 2부두는 소형선박(5,000톤급 이하)과 분진화물(dirty supply)을 처리할 수 있는 군산항 유일의 특화 부두이고, 1~3부두의 집안모선 비율이 군산항 전체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고시대로 시행된다면 제1·2부두 취급화물 이탈로 항만허역근로자 인원감축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재만 의원은 "현재도 5~7부두에서 사료부산물보다 분진이 적은 곡물류(옥수수, 소맥) 하역 작업 시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5~7부두에서 분진화물 하역 작업 시 한국GM, 세아베스틸, 흥보산업,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민원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1·2부두를 대체해 소형선박(5,000톤급 이하)이 5~7부두에 정박할 경우 부두 안벽과 선박 사이에 1.5~2m 이상의 간격이 발생하고, 5~7부두의 구조상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하역작업원의 사고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29일 발표한 제3차 항만기본 수정계획 확정·고시 내용에 따르면 군산항 제1부두는 해경·관공(소형)선 부두, 제2부두는 소형 여객선 부두 기능조정으로 화물취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광영 기자

총선 선거사범 40명 구속... 현직의원 7명 기소

지난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직 의원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청은 11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법처리 통계를 공개하며 총 1819건, 3049명을 적발해 40명을 구속하고 87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혐의없음 등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가 1001명(3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표행위(463명·15.1%), 사전선거운동(282명·9.2%), 인쇄물배부(257명·8.4%), 현수막훼손(214명·7%) 등이 뒤따랐다.

현직 의원 중에는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9명은 혐의없음, 30명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당선인 중에는 공표행위 유형이 17명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포 16명, 사전선거운동 8명, 탈법방법 문서배부 8명 등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미르 재단 연봉 돈잔치... 직원 평균 9218만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권 실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택단과 관련, "미르 재단의 평균 연봉이 9,218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르 재단의 평균 연봉은 인 의원이 조사한 전체 정부산하 35개 재단법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르·K스포츠택단의 사업장직원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르 재단의 2015년 12월 기준 유급 직원 6명의 평균 연봉은 9,21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은 기본급 기준 1억6,640만원으로 조사됐다.

인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산하 기관 중 삼일 기관장이 있는 35개 재단법인의 평균 연봉은 5,807만원이었다. 미르 재단의 평균 연봉(9,218만원)이 약 1.6배 높은 셈이다.

또 미르 재단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K스포츠택단의 경우 2015년 2월 사업장직원신고서 기준으로 유급직원 8인의 평균 연봉은 6,9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정부산하 35개 기관의 평균 연봉보다 높았다. K스포츠택단의 최고 연봉은 기본급 기준으로 9,879만원으로 조사됐다. /뉴시스